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1. 28. (금)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폐기된 공약’ 재등장 이유 궁금... 주도적 의제 구성 돋보여 (1/27)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링

2022년 1월 27일 <KBS 뉴스 9>

이날 KBS 뉴스 9 대선 보도는 양자토론 이슈 보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동정 그리고 공공일자리 공약 기획 보도로 구성되었다.

윤석열 후보 동정의 경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하겠다는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다뤘다. 본래 경제 공약을 준비했었으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맞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발표하게 된 공약이라며 정치공학적 관점을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실’ 공약은 대통령 인사권 개혁과 대통령실 재구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근무 공간 이전에만 초점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지점으로는 이번 청와대 관련 공약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실은 폐지하여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경호와 의전 등의 실질적인 문제로 공약은 폐지되었다. 윤 후보 또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양수 선거

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모두 옮기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한 번 폐기된 바 있는 공약인만큼 그 실현 가능성을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동정 보도에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동정은 생략되었다. 당일 공식 일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심 후보는 경찰젠더연구회 소속 여성 경찰들과 만나 성평등 의제를 논의하였고 안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 육성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같은 날 SBS 8 뉴스 또한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동정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MBC 뉴스데스크는 윤 후보 동정 보도 뒤에 짧게 요약하여 언급하였다. KBS 뉴스 9는 3사 방송사 중 비교적 균형 있게 각 대선 후보의 동정을 다뤘었다.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균형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 모니터링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양강 구도가 더욱 심화되겠지만 그럴수록 공영 방송으로서 양강 구도에 갇히지 않고자 하는 태도와 책임감이 절실해진다.

대선 보도 중 마지막은 기획 보도인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가 이어졌다. 이전에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한 의제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짚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입장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창출’로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뽑은 사안이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공공 일자리 창출’로 좀 더 초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공 중심 일자리 보다는 민간 중심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KBS는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공공 일자리 영역”이기에 공공 일자리를 중심으로 후보에게 질의하였다. 이는 언론이 논의할 사안의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의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부분이다.